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

- 일 시: 2018년 3월 6일(화) 10:00~12:30
- 장 소: 충남연구원(1층 회의실)
- 주 최: 충남연구원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모색

1. 개최목적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충남도 예외는 아님.
- 2050년 인구예측에 의하면 충남은 인구가 정체 혹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남지역 대부분의 농촌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노동·복지체계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국정과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행정안전부) 등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
-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인구감소라는 거시적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사개요

- 행사명: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 일 시: 2018년 3월 6일(화) 10:00~12:30
- 장 소: 충남연구원(1층 회의실)
- 주 최: 충남연구원

3. 프로그램(안)

10:00 ~ 10:10	참석자 소개
10:10 ~ 10:50	주제발표 발표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양육정책을 중심으로 - 손동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2. 인구감소시대, 위기의 지방을 위한 정책방안 - 이소영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50 ~ 12:30	종합토론 좌장: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 김범주 담당관(공주시 시정담당관실) -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 박세훈 박사(국토연구원) - 장동호 과장(충청남도 미래정책과) - 송두범 박사, 임준홍 박사, 이관률 박사, 김양중 박사, 김용현 박사(충남연구원)

발표01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모색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양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손동기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양육정책을 중심으로

2018년 3월 6일 충남연구원

손동기

목 차

-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프랑스에서 경험한 출산과 육아 문화
- 프랑스 정책이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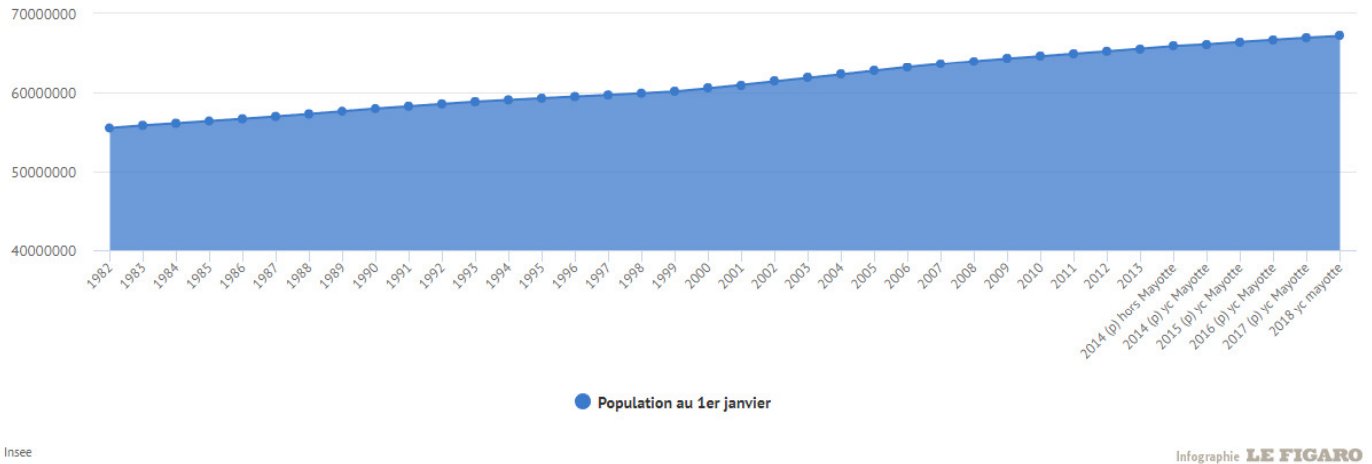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인구 변화

- 프랑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러나 증가세 둔화
- 독일 81.2백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67백만명(2017년 1월 기준)
- 자연증가 200,000명, 이주로 증가 47,000명

La population augmente mais mo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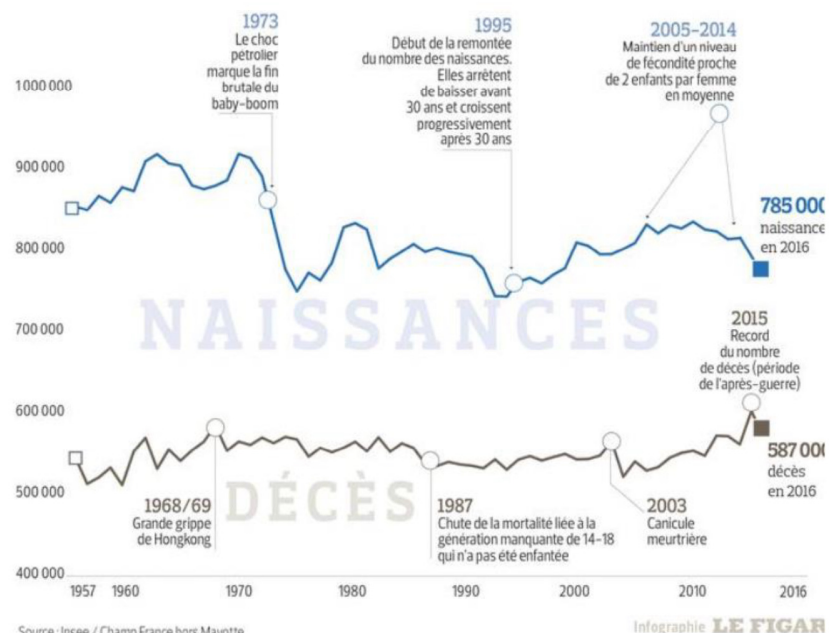
POPULATION AU 1ER JANVIER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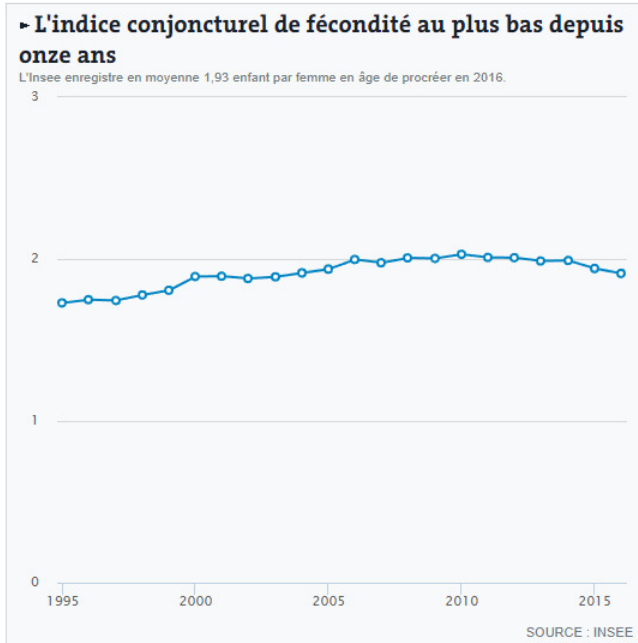
- 인구증감요인 변화추이

Nombre de naissances et de décès en France, depuis 1957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출산율은 점차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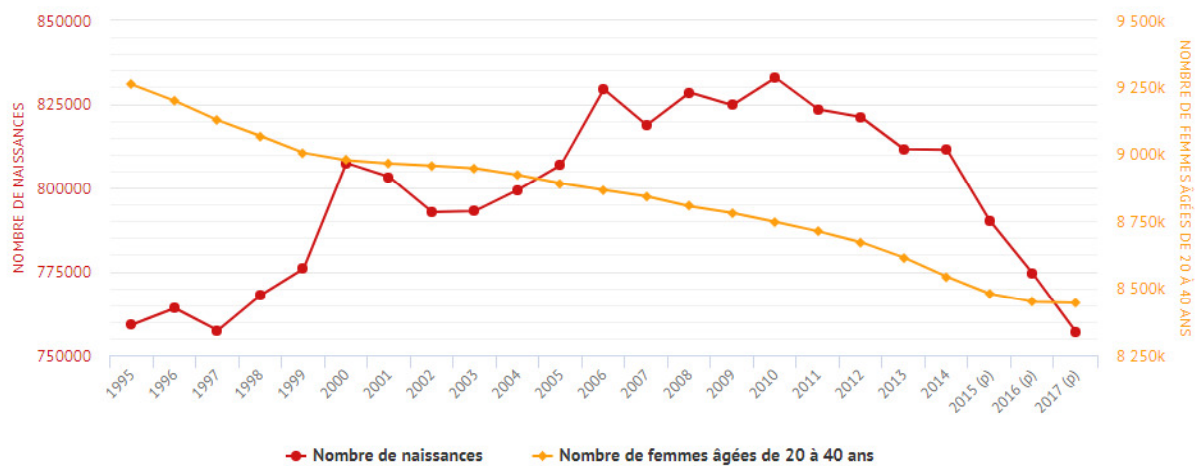
- 2016년 출산율 감소: 2014년 2.0명, 2015년 1.93명, 2016년 1.93명(미국은 2008년 2.12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감소, 영국은 같은 기간 1.96명에서 1.82명으로 감소)
- 25-29세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큼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인구전망

Le nombre de naissances baisse depuis 3 ans

NOMBRE DE NAISSANCES ET NOMBRE DE FEMMES DE 20 À 40 ANS EN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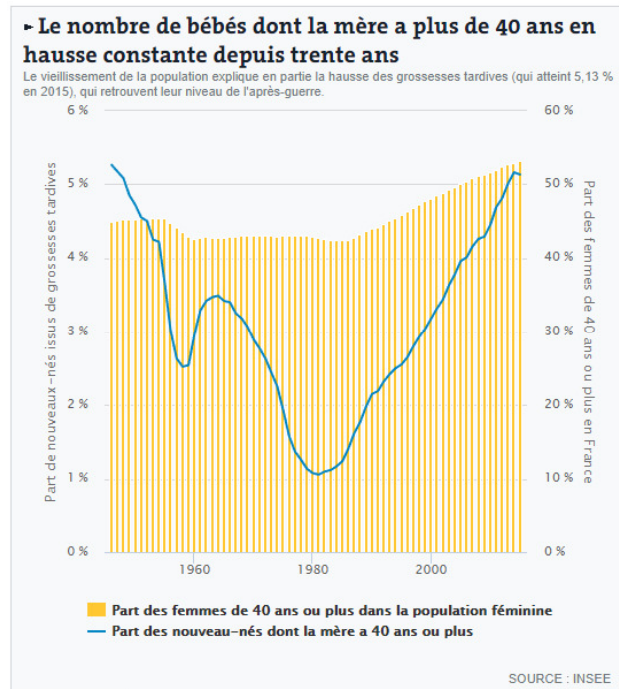


Insee

Infographie **LE FIGA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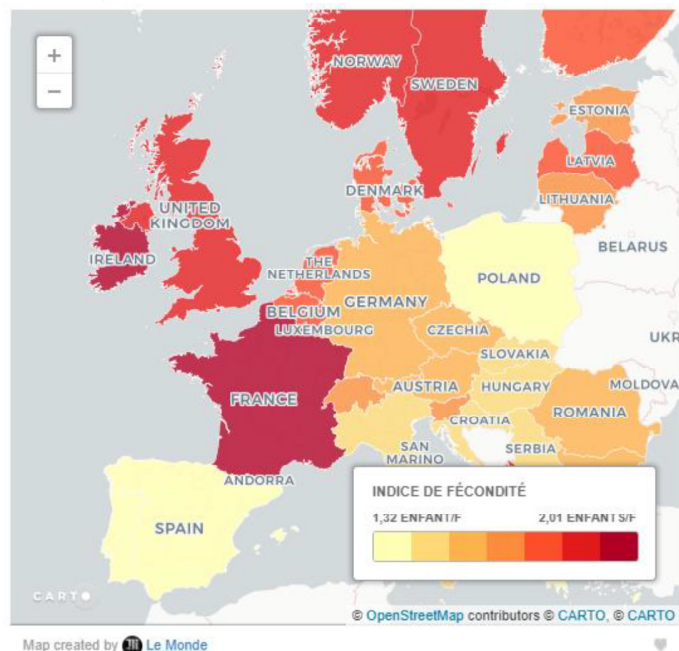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산모의 평균 연령 증가
- 2017년 1월 17일 LA Croix, Manif 의뢰로 Ifop이 조사한 출산에 대한 응답에서 프랑스인들은 가족정책의 안정화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응답이 70%
- 같은 조사에서 55%는 가족정책이 새로운 출산에 영향을 중요하게 미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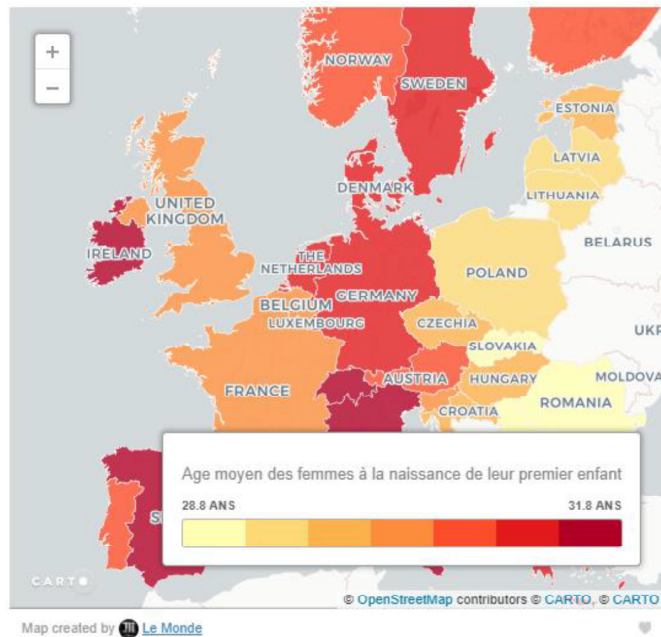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2014년 유럽국가 출산율 지표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유럽국가 산모의 평균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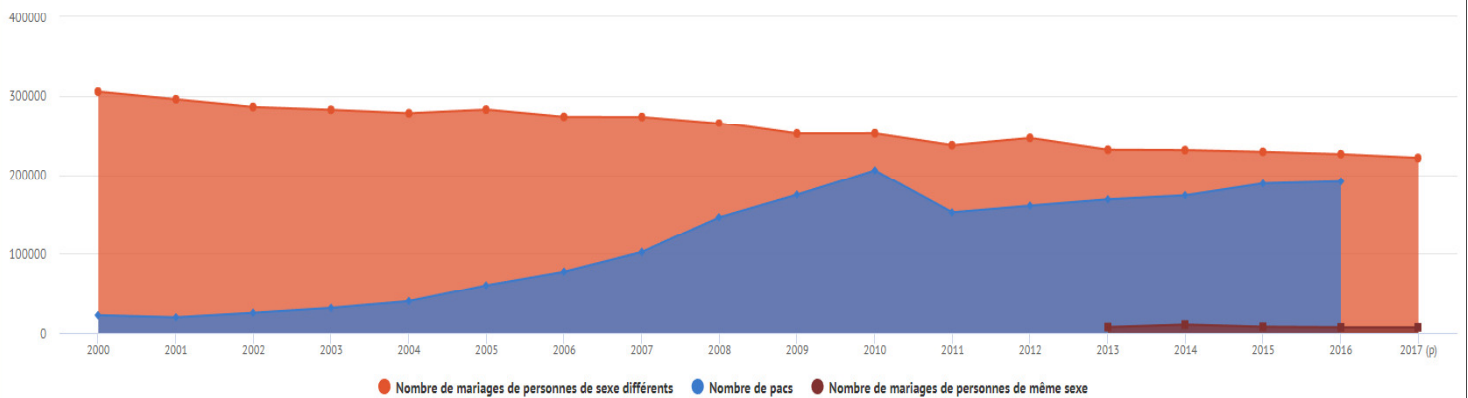


프랑스 인구통계학적 특징

- 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결합 변화 추이(이성 간 결혼, 사회적 결합, 동성 간 결혼)

228000 mariages ont été célébrés en 2017

NOMBRE DE MARIAGES CÉLÉBRÉS



Insee

Infographie **LE FIGARO**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인구 관련 정책·제도
 - 2016년 Le ministère des familles, de l'enfance et des droits des femmes 신설
 - Direction Generale de la Cohesion Sociale(사회통합총국)
 - 총리실 직속에 2009년에 만들어진 Haut Conseil de la Famille, de l'enfance et de l'age(가족·아동·고령화 정책고등위원회)을 통해 부처간 업무효율 향상과 민관대표가 참여하는 가족 및 사회보장 관련 지원 정책 검토에 큰 역할을 수행
 - 1967년 피임의 허용, 1974년 낙태의 허용, 1999년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협약)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가족정책·제도 발달사
 - 1938년 2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하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신설
 - 1939년 가족·출산법(Code de la Famille et de la Natalité française)제정
 - 1946년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수당', '출산 전수당', '출산수당' 등 가족지원 규정
 - 1978년 가족수당 정책에 보편주의 도입,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 지급
 - 1981년 미테랑 대통령 때 가족수당 25% 증액하고 지급절차 간소화 추진
 - 1990년 보모 고용을 위한 가족 지원제도(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신설
 - 2004년 '새 아이를 맞이하는 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로 제도의 일원화
 - 2013년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서 예산 감축 시작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출산지원금(LA PRIME DE NAISSANCE)
 -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게 출산 후 2달 이내에 지급되는 수당
 - 2018년 3월 31일까지 아이 한 명 당 923.08유로
 - 입양을 했을 때는 1846.15유로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추가 자녀당
커플, 외벌이 1명	35 944 €	42 426 €	48 907 €	55 389 €	6 482 €
커플, 맞벌이 2명	45 666 €	52 148 €	58 629 €	65 111 €	6 482 €
한부모	45 666 €	52 148 €	58 629 €	65 111 €	6 482 €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충수당으로 가정의 소득에 따라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2018년 3월 까지 자녀 1인당 월 92.31유로 또는 184.62유로 지급 (2018년 4월부터는 184.62유로에서 169.02유로로 15.60유로 감소, 92.31유로에서 84.51유로 감소)
 - 완전수당(184.62유로) 수급 기준: 외벌이의 경우 1명의 자녀 30,086유로(추가 자녀 당 5,425유로), 한부모가정 또는 맞벌이의 경우 1명의 자녀 38,264유로(추가 자녀 당 5,425유로)
 - 부분수당(92.31유로) 수급 기준: 외벌이의 경우 1명의 자녀 35,944유로(추가 자녀 당 6,482유로), 한부모가정 또는 맞벌이의 경우 1명의 자녀 45,666유로(추가 자녀 당 6,482유로)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자녀돌봄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탁아소(crèche, 2개월-3세 대상) 및 유치원(école maternelle, 3-6세 대상)에 가지 않는 경우 소득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
 - 이 정책의 취지는 부족한 탁아소와 같은 돌보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방식의 선택 지원

		20,550유로 이하	20,550유로-45,666유로	45,666유로 이상
자녀 1명	3세 미만	462.78	291.82	175.07
	3-6세	231.39	145.93	87.54
		23,467유로 이하	23,467유로-52,148유로	52,148유로 이상
자녀 2명	3세 미만	462.78	291.82	175.07
	3-6세	231.39	145.93	87.54
		291.82	26,384-58,630유로	58,630유로 이상
자녀 3명	3세 미만	462.78	291.82	175.07
	3-6세	231.39	145.93	87.54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자녀돌봄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돌봄기관(association, entreprise ou micro-crèche)에 보낼 경우

		20,550유로 이하	20,550유로-45,666유로	45,666유로 이상
자녀 1명	3세 미만	700.3	583.58	466.88
	3-6세	350.16	291.8	233.44
		23,467유로 이하	23,467유로-52,148유로	52,148유로 이상
자녀 2명	3세 미만	700.3	583.58	466.88
	3-6세	350.16	291.8	233.44
		291.82	26,384-58,630유로	58,630유로 이상
자녀 3명	3세 미만	700.3	583.58	466.88
	3-6세	350.16	291.8	233.44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 자녀가 최소한 2명 이상
 -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 50%, 25%로 감축
 - 두 자녀(129.86유로), 세 자녀(296.24유로), 네 자녀(462.62유로, 그 이상일 때는 한 명 당 166.38유로 씩 상향 조정)
 - 14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64.93유로 추가(majoration) 지급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다자녀가구 특혜(세 자녀 이상)
 -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e): 소득이 37,780유로(외벌이), 46,217유로(맞벌이) 이하 169.03유로
 - 이사 지원금(prime de déménagement): 2018년 4월까지 세 자녀(978.82유로), 네 자녀(1060.39유로), 자녀가 한 명 더 추가 시(81.57유로)
 - 다자녀가구 카드(carte famille nombreuse): 전기, 보험, 교통, 문화시설 등등
 - 퇴직연금 납입기간 단축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의료보험 혜택
 - 임신 확진 이후 3개월 이전에 신고 이후 모든 의료비 무료(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 인공수정 비용 전액 부담.
- 출산-육아 휴직제도
 - 출산휴가는 의무사항으로 최소 8주
 -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산전휴가 최대 2주 및 산후휴가 최대 4주 추가 가능
 - 남편도 출산 후 4개월 안에 최대 11일(공휴일 주말 포함) 가능
 - 육아휴직은 부부 합산 휴직이 가능. 첫째 자녀는 12개월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36개월
 - 육아휴직수당은 첫 째 자녀는 6개월, 둘째부터는 12개월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개학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6-18세 자녀에게 8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
 - 가계의 수입이 자녀 1명 24,453유로, 2명 30,096유로, 3명 35,739, 3명 이상의 자녀 추가 시 한 명 당 5,643유로 추가로 계산해서 그 이하
 - 6-10살: 364.09유로
 - 11-14살: 384.17유로
 - 15-18살: 397.49

프랑스 출산 및 양육 장려정책

- 양육시스템
 - 가정에서 아이돌봄이에 대한 자격과 관리를 국가가 엄격하게 심사
 - 아이돌봄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5년 단위로 국가 자격증 발급
 - 아이돌봄이의 경우에도 사회보장혜택, 유급휴가 등 정규직과 같은 대우 보장
 -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서 아이돌봄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50%를 납세 소득에서 감면(Credit d'impôt famille)

프랑스에서 경험한 출산과 육아문화

- “꼭 필요할 때면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 ‘첫 검진 확인서(Une attestation du premier examen médical)’
- 프랑스의 공적의료보험 CMU(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사무소에 가서 ‘임신 신고(Déclaration de grossesse)’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건강보험공단(Assurance maladie)에 빨리 가입
- ‘임신 신고(Déclaration de grossesse)’를 ‘가족수당금고(La caisse d'allocation familiales, CAF)’와 ‘기초의료보험금고(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 제출. 2015년부터는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Gynécologue)가 입력을 하면 바로 등록
- 2006년에 출산 준비금으로 약 820유로와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을 매달 받음
- 가족의 구성원의 돌봄까지 포함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아이들이 가족의 돌봄을 받음

프랑스에서 경험한 출산과 육아문화

-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한다면 매달 390.92유로, 노동시간을 주당 24시간을 넘지 않으면 252.71, 노동시간을 50~80%로 줄이면 145.78유로가 첫째 아이에 대해서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 동안 지급(<http://www.caf.fr/>, 2017년 기준)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간다는 즐거움을 사회가 선사 함으로써 출산에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

프랑스 정책이 주는 시사점

- 프랑스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형태의 수용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해오고 있음
- 특히 다양한 결혼에 대한 인정이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혼외출산 자녀가 과반을 넘는 것에서 알 수 있음
-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운영. 20-49세 여성의 약 70% 이상이 경제활동(정규직, 비정규직 모두를 포함)
-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가족수당기금(CAF)으로 충당
- 프랑스에서 교육은 거의 무료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약 7% 정도에 불과
-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중심에는 출산장려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양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 운영
- 2013년 가족정책 개혁으로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감축되었지만 여전히 가구의 소득에 따른 보조금 및 양육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 중

프랑스 정책이 주는 시사점

-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과 제도 운영
- 프랑스의 출산·양육 관련 예산은 현금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등 포괄적 방식 적용
- 다자녀를 가질 경우 일상에서 얻는 혜택(소득세 감면, 주택보조금, 각종 할인혜택 등등)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
-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종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제도로 보장, 즉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제도가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영속성(stabilité)에 대한 우려가 출산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큼
- 프랑스의 보육·양육정책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이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참고자료

- <http://droit-finances.commentcamarche.com>
- <https://www.insee.fr>
- <https://www.caf.fr>

감사합니다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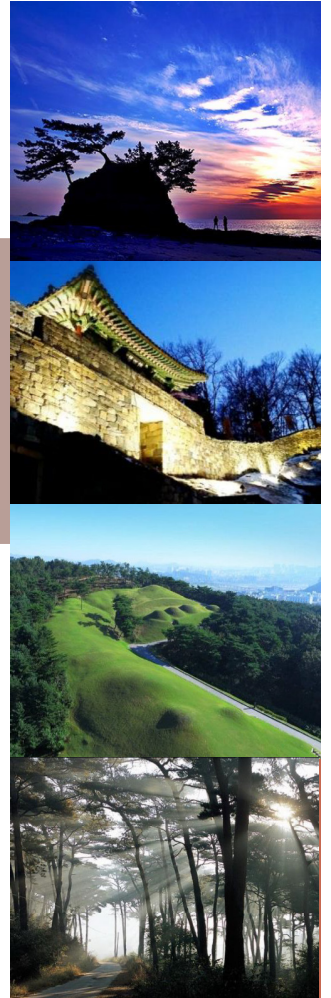
인구감소시대, 위기의 지방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인구감소시대, 위기의 지방을 위한 정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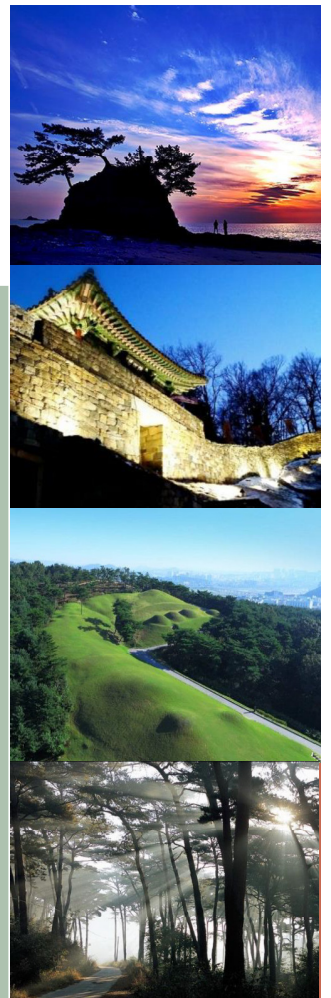
2018. 3.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ontents

-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 II .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 III . 해외의 관련 정책 분석
- IV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모색
- 별첨)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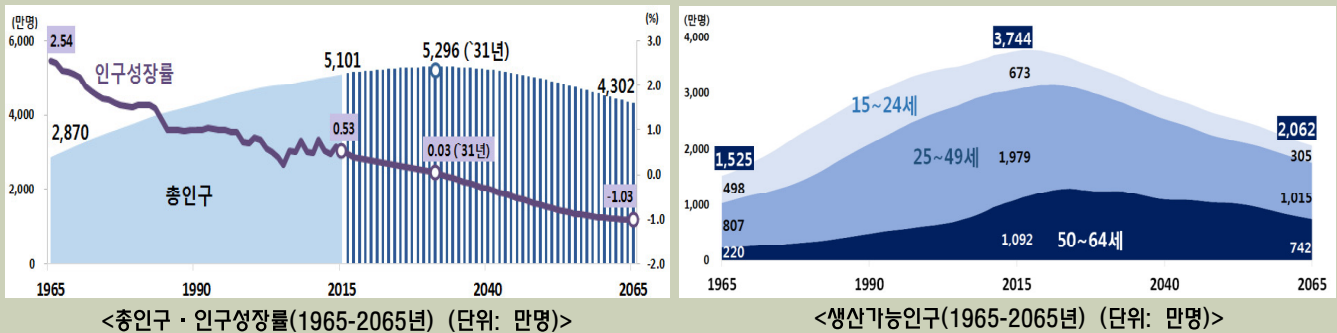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

-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전망
 -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에 이를 전망
 - 특히 유소년 인구가 2015년 703만명에서 2020년 657만명 2065년 413만명으로 40% 이상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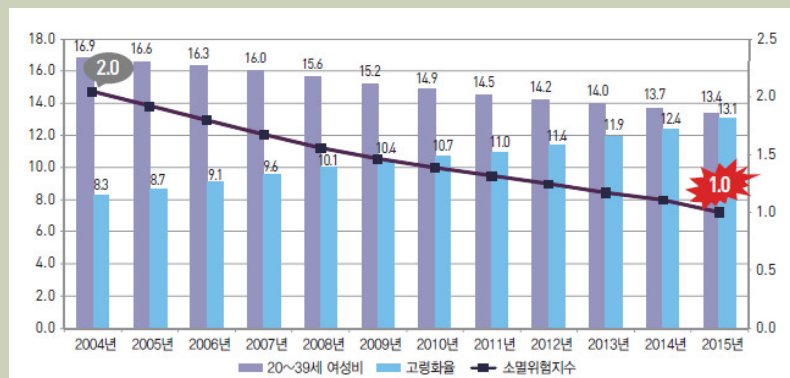
3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

- ✓ 합계 출산율은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1.3명으로 세계 198개국중 196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
 - 1996년 1.57명, 2000년 1.47명, 2010년 1.23명, 2015년 1.21명으로 하락
- ✓ 한국고용정보원(2016)에 따르면, 저출산 · 고령화 현상으로 30년내 82개군중 69개군(84.1%)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



<20~39세 여성인구비중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추이(2004-2015년) (단위: %,상대비)>

4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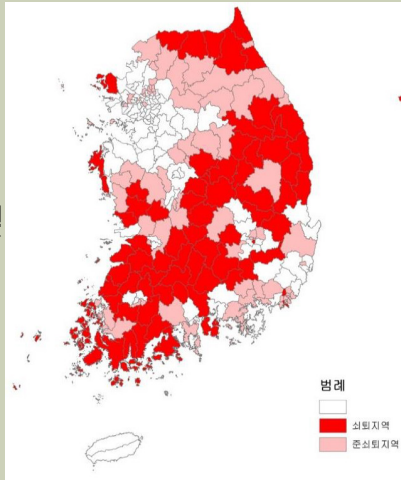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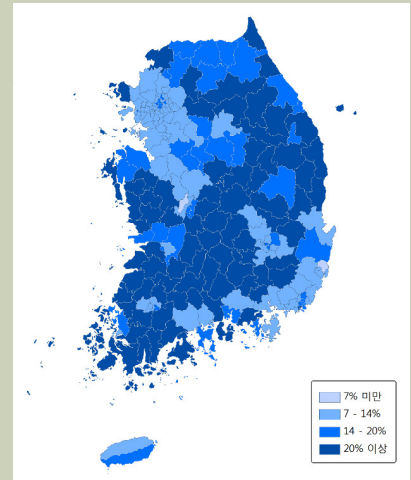
-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이슈가 제기되기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쇠퇴지역은 주로 강원, 경북, 전북, 전남에 집중되고 있음을

밝힘

- 지역쇠퇴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은 인구감소,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 등 인구사회요인이었음
- 쇠퇴지역 대부분은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해있음



<쇠퇴지역 현황(2012)>



<고령화율(2016)>

5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

-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구조변화를 분석한 결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2000~2016년까지 226개 지자체중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61.1%(138개)
- 가장 심각한 유형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자연 및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유형인데, 77개 지자체가 해당하며, 군지역이 59개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유형	개수	비율	시	군	구
인구증가지역			합계	88	38.9%	47	18	23
	+	+	유형1	52	23.0%	35	8	9
	+	-	유형2	28	12.4%	12	2	14
	-	+	유형3	8	3.5%	-	8	-
인구감소지역			합계	138	61.1%	28	64	46
	-	-	유형4	77	34.1%	14	59	4
	+	-	유형5	61	27.0%	14	5	42
			합계	226	100.0%	75	82	69

<인구증감지역 현황(2017)>

6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

- ✓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이 모두 가장 심각한 유형인 유형4에 해당
 - 홍성군을 제외한 5개시는 모두 자연/사회적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1에 해당하여, 인구증감의 기준만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 지역간 격차 심각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유형	충남	
인구증가지역			합계	6	
	+	+	유형1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	-	유형2	-	
	-	+	유형3		홍성
인구감소지역			합계	9	
	-	-	유형4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	유형5	-	-
	합계				

<인구증감지역 현황(2017)>

7

I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

경제성장동력 저하, 인구 오너스(Onus) 사회 진입

- 베이비붐 세대 대거 은퇴,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비 부담 급증으로 저축, 소비 및 투자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 사회 진입
- 고령화는 노동력, 저축, 투자, 성장, 재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인구감소는 국내 중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IMF, 2017)

지역 양극화 심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저하

- 지역의 인구감소는 교육, 의료, 보육, 교통 등 생활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달성 어려움
- 기초 정주여건의 미비로 생활불편을 유발하면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초래
-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생활취약지역 증가, 생활사막(Life Deserts) 확대 전망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생활안전성 저하 / 지자체 행정비용 급증으로 지방자치 위기

- 빈집, 폐경지 등 유휴공간의 증가에 따라 우범화 및 수해·병충해 등 발생 우려 등
- 생활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유지관리에 투입가능한 자원 축소로 유실·붕괴 등 재난 증대
-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로 지자체 행정비용 급증

8

II.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국토공간정책의 한계

- 국토 및 도시계획은 미래의 국토 및 도시공간을 위한 선언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기능을 수행
- 여전히 개발 및 효율성 위주의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인구감소에 따라 국토 도시개발 규모는 장기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2010년 말 기준, 국토부 승인 128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와 실제인구수 변화 주이를 살펴본 결과, 127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수립 인구수가 과다하게 예측되고 있음 (감사원, 2011)

구분	실제인구(인)			도시기본계획 인구(인)				
	1990	2010	증감	기준년도	목표년도	자연적증감	사회적증감	증감
삼척시	110,557	67,454	39.0% ▽	74,557 (2004)	100,000 (2020)	77 ▽	20,500 △	34.1% △
공주시	158,067	122,153	22.7% ▽	133,012 (2002)	210,000 (2020)	16,612 ▽	93,600 △	57.9% △
남원시	124,524	78,770	36.7% ▽	101,950 (2004)	130,000 (2025)	1,950 ▽	30,000 △	27.5% △
나주시	158,634	78,679	50.4% ▽	99,308 (2004)	150,000 (2020)	10,410 ▽	61,236 △	51.0% △
밀양시	133,043	99,128	25.5% ▽	112,451 (2007)	190,000 (2020)	9,131 △	69,000 △	69.0% △

영향

<인구감소도시의 실제 인구와 도시계획 기준인구 비교(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9

II.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한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자연적 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 문제지역 대응 한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이어서 지역발전정책과 연계 미흡
- 기본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중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과 같은 보건사회시책
- 예산지원이 없는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미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

II.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

- 생활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생활기반계정과 지역산업육성 위주의 경제발전계정은 정권이 바뀔에 따라 계정별 사업내용의 구분이 모호해짐
- 참여정부 당시에는 주력 정책이었던 지역혁신계정사업보다 지역개발계정 사업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가, 실용정부 들어 광역계정에 국토부의 기반시설확충 사업이 대거 편성되면서 광역계정이 지역계정보다 높게 편성된 경향이 현재에 이름
- 한번 계획되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 위주 사업으로 주민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한계
- 인구감소지역에서도 개발시대의 인프라 위주 사업 지속 추진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경제계정	1.3	1.4	1.5	1.7	5.4	5.8	5.8	5.5	6.2	5.5	5.4
생활계정	4.1	4.5	5.0	5.8	3.8	3.7	3.6	3.5	3.4	3.4	4.5
제주계정	-	-	0.3	0.4	0.4	0.4	0.4	0.4	0.3	0.3	0.3
세종계정											0.1
합 계	5.4	5.9	6.8	7.9	9.6	9.9	9.8	9.4	9.9	9.2	10.3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6. 5),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심의자료」.

11

II.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종합분석

개발 시대의 국토공간정책 추진 한계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최근 환경변화를 국토공간정책이 실효성있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인구감소 등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외곽 확산형 대규모 단지 개발은 지양하고, 압축도시 형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에도 계획수립권자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창의적 지역개발을 실현하지 못함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한계

- 개발 수단이 선도산업 육성,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등 개발 시대의 사업내용으로 고착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의 질 정책 추진 애로
- 주민체감도 높은 시군구 단위의 핵심 브랜드 정책 추진 미흡

보건사회정책 위주의 저출산·고령화정책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 지원정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편재
- 출산수당 등 직접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 전환 필요

12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일본



지역활성화 전략

구분	도시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설치시기	2001년 5월	1998년	2002년 7월	2003년 10월
근거법	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2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 (1998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2002년)	지역재생법(2005년)
목적	도시기능의 고도화 및 도시 거주환경 향상	중심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활성화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성화 도모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산업진흥, 환경개선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대상 구역	1. 도시재생근접정비지역(1ha이상) 2. 도시재생특별지구	중심시가지활성화구역	지방자치체(시장촌 또는 도도부현 또는 복수지자체) 전부 또는 일부	특별히 없음 (대다수 시장촌 전역)
사업추진 지역	1. 거대도시(도쿄, 오사카의 도심) 2. 지방 중핵도시(현청소재지)	1. 지방 중핵도시(현청소재지) 2. 30만 이상의 지방도시	1. 전국의 市町村 2. 전국의 都道府縣	전국의 시장촌
주요사업 내용	1. 대도시권 국제교류, 물류기능강화 2. 대도시권 환상도로 체계정비 3. 오사카권 생명과학 국제거점형성 4. 도쿄권에 계통과학 국제거점형성 5. 지방 중핵도시 선진적 개성도시 만들기	1. 중심시가지 정비개선 2. 도시 복지시설 정비 3. 시가지 거주촉진 4. 상업활성화	1. 국제공항특구 2. 농업특구 3. 교육특구	1. 생활환경정비사업(도로, 상하수도) 2.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고용창출 3. 도농교류 및 관광진흥
지원조치형태	교부금+규제특례+ 금융지원+세제특례	규제특례+세제특례+ 보조금	규제특례	교부금+규제특례+ 보조금+과세특례
추진절차		자치단체가 중심시가지 기본계획작성→인정신청→내각부가 관가 관련성과 조정→특구계획작성 인정신청→내각부가 심사, 관계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음→인정 및 인정신청→인정(내각부)	제안모집→자치체가 제안→내각부 인정신청→내각부가 심사, 관계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음→인정 및 인정신청→인정(내각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작성→ 인정신청→내각부가 심사, 관계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음→인정 및 인정신청→인정(내각부)

13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일본



지역재생전략

- 2005년 지역재생법 제정으로 도시재생과 별도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고용창출, 관광진흥 등의 사업에 정부 보조금과 특례 지원

구분	단독시책수	타부처 연계시책수	지원시책(예시)
지역 인제거점 재생 프로그램 (35)	18	17	과학기술진흥 조성·정비/ -국립대학 지역진흥, 지역공헌 관련사업
지역고용재생 프로그램 (60)	41	19	지역고용재생추진사업/ 외국기업유치지원사업/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유대재생 프로그램 (77)	63	14	관민파트너십지원사업/ 문화예술창조마을 지원사업 지역 중 자립지원사업 등
지역 제도전주진 프로그램 (40)	32	8	제도전 지원기부금 제도/ 산촌재생 종합대책사업 지역자립종합지원제도 등
지역교류 연계추진 프로그램 (95)	79	16	농산어촌활성화 지원기부금/ -광역연계공생대류 추진교부금 -강한농업 만들기 교부금 등
지역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110)	84	26	지역자본시장육성프로젝트/ 외국인연구자 영주허가 탄력화 사업 지역재생지원이자 보조금 등
지역 지구온난화 대책 프로그램 (94)	85	9	저탄소지역만들기 면적대책 추진사업/ 지역바이오매스 활용교부금 환경부하저감 국민운동지원 비즈니스 추진사업 등

자료: 地域活性化統合本部(200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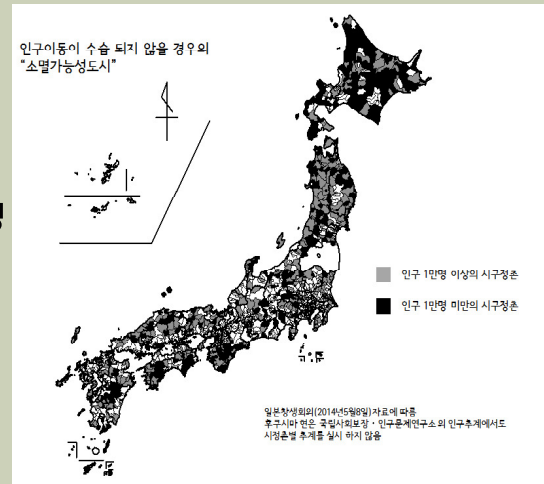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추진배경

-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식 확산
- 2014년 일본창생회의에서 소멸가능성도시 발표
 -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지속될 경우, 약 1,727개 시구정촌 소멸가능성 제기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을·사람·일 창생법 제정
 -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고 50년 후에도 1억명 인구 유지 목적
 -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시정하여 모든 지역이 살기좋은 환경 마련



<일본의 소멸가능성도시 전망>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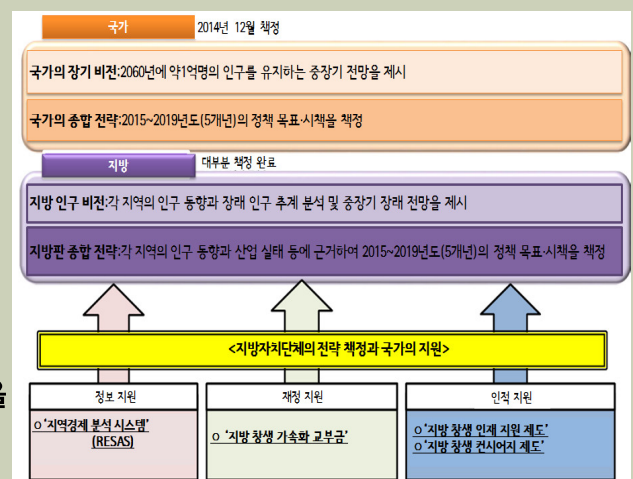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관련 계획

- 국가의 장기비전
 - 도쿄 대도시권으로 집중 시정
 -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육아 희망 실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
- 국가의 종합전략(5개년계획(2015~2019)) 수립
 -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
 -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의 흐름
 -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 실현
 - 시대에 걸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키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
- 지방의 인구비전과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



<국가와 지방의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16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관련 시책

기본목표	창생종합전략의 주요 추진시책
1.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 지방인재회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 유입 촉진	· 지방이주 촉진
	· 은퇴자 커뮤니티 지원 추진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 작은 거점(다세대 교류, 다기능형 집락생활권) 형성 지원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안심할 수 있는 삶 지키기, 지역간 연계 촉진	·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 대도시권의 안심생활기반 확보

17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관련 지원

- 지방창생가속화 교부금 지원
 - 지방판 종합전략에 대한 우수시책에 우선 지원 (2015년 기준, 1,700억엔, 보조율 10/10)
 - 2015년부터 지방재정세출에 1조엔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지원 추진 (지방교부세는 행정개혁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인구증감을 및 지방창생대응 성과를 나타낼 때 지원)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 지방창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군구(시정촌)에 단체장 보좌역으로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 민간 인재 파견/ 보좌역은 창생종합전략에 기재된 시책 추진을 핵심적으로 담당
- 지역진흥협력대
 - 지방에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지역 주민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위촉
 - 협력대원은 약 1~3년간 거주지역의 지역브랜드와 상품의 판촉, 지역진흥을 위한 협력활동 수행
 - 협력대의 활동비 및 대원의 창업에 필요한 경비는 총무성이 교부금으로 지원

18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추진배경

- 포용적 성장 논의의 배경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으로 자유시장적 경제체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회의적 논의 증폭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World Bank, OECD, UN-HABITAT 등 국제기구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 활발히 제시

➤ OECD의 포용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함

‘포용’의 개념	그동안 도약시킨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성장 방식(OECD, 2014)
포용적 성장 개념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 의료 같은 소득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역들을 고려하는 성장방식
포용적 성장 목표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
주진전략	경제적 성장 = 목표, 다차원의 이슈들이 다루어지는 과정 자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실질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 조세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자료: OECD(2014) Report on the OECD Frame Growth. Paris.

19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사례

지역발전정책

➤ 효율적인 사회 경제적 기반시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에 동등한 접근이 관건

구분	주요이슈(포용적 성장 위한 정책방향)
접근성향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기반시설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시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 공유재산인 기반시설에 대한 잘 설계된 규제
	도시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나은(well-developed, reliable, and accessible) 교통시설 • 새로운 교통시스템 적용시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 적절 가격에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 통합적 도시계획/ 계획결정은 대도시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하고 구매 가능한 에너지 기반시설→ 편의 균등 배분 • 적절수준 난방시설을 위해 지불 가능하지 않은 계층 존재
	산간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간벽지에 필수서비스 공급하는 어려운 문제/ 유사서비스의 집적 및 연계 • 대안적 시스템 제안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필요 •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공간적 차원이 존재(도시에서 빠르게 확산) • 정책수립 시 목적과 수단의 충돌과 보완 발생 가능함을 인지할 것 •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중심/장소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

20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사례

지역발전정책

구분		주요이슈(포용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강화	사람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에 효율적 자원배분을 추구, 공공서비스 공급은 본래 장소중심적임 이동비용은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의미/ 공공지원주택의 디자인 자체가 거주민의 웰빙과 주변 공동체에 영향
	장소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지식은 상이한 목적 간에 시너지 창출 및 갈등 조정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정책은 특정 장소의 성장촉진과 지역간 격차 해소 등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또한 장소중심적 토지이용, 교통, 경제발전정책의 통합은 녹색성장에 기여 지식기반활동의 점유율 상승은 임금격차 심화 및 불평등 야기 근린재생은 임대료를 올리고 취약계층의 이주 촉발 가능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람중심의 주택정책은 도시발전정책과 연계 물리적 공간정책으로서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에 초점을 맞출 것 도시경쟁력 정책은 취약계층을 고려 통합적이고 장소중심적 접근법은 지역맞춤형으로 다양화된 수요에 재량과 탄력성을 부여 도시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치가 중요

자료: OECD(2015)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OECD, Paris.

21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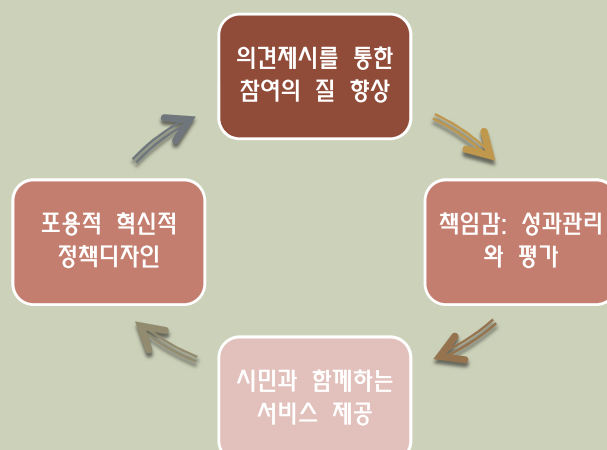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사례

추진역량강화

- OECD 역량 강화 정책방향: 빈곤층 참여 제약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
- 빈곤층을 위한 성장의 관점(a pro-poor prospective)은 장소중심적 접근법으로서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함

<포용적 정책 사이클>



22

III. 해외의 관련 정책분석 -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사례

추진역량 강화

의견제시를 통한 참여의 질 향상

- 시민들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채널 마련, ICT 등 신기술도 중요하나 기존 전통적인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
-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 서비스 사용자가 아닌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
- 정부가 적절한 정책대상을 선정, 보다 직접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포용적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짐
- 누구의 목소리를 정책디자인 과정에서 어느 범주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개별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포용적 · 혁신적 정책디자인

- 부처 간,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using joined-up government);
- 공유된 비전 제시하고 사용자와 함께 정책을 디자인 할 것
- 개별 그룹의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
-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구축과 정책대상 명확화

시민과 함께하는 서비스제공

- 다양한 레벨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고취/ 공급망 관리를 위한 비전 제시
- 정책디자인과 시행에 있어 다양한 레벨의 정부 간 협력
- 핵심 공공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해하고 체득될 수 있게 만들기
- 다양성 존중과 성별균형 보장
- 비정부기구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개입시 투명성과 신뢰가 핵심임을 인지하고 정보공유와 상호신뢰 구축

포용적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

- 증거와 성과 기반의 문화 구축
- 철저한 회계관사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평가 시스템 구축
- 성과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잘못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활용
- 우수 운영사례에 대한 토론의 장-플랫폼 구축

23

IV.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모색



필요성

국제사회의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 개발시대의 격차문제 해결없이 더 나은 발전은 없다는 인식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SDGs) 성장 대두
- 결실 재분배를 통해 더 나은 견고한 성장으로 향해간다는 포용적 성장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 등장

인구감소지역의 양극화 심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저하

- 지역 인구감소 → 기초 정주여건 미비로 인구유출 가속화의 악순환 초래, 생활취약지역 증가, 생활사막(Life Deserts) 확대 전망 → 재해위험 증가 → 사회적 비용 증가 → 최소기준 충족 필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을 마련 필요

-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은 개발시대의 SOC 확충 사업 답습, 인구사회정책은 보건의료정책 한계
- 인구 오톤스 시대 대비 범국가적 대책 마련 → 인구구조변화, 국내 총수요 감소, 저성장의 악순환 타파 →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필요

24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기본방향

스마트축소(smart Shrinkage) 지향 지역발전

-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구감소현상을 도시성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
- 토지, 자원 등을 적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비우는 스마트 축소 지향 지역발전추진

생애주기별(life-cycle) 신규 지역수요 반영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교육, 복지, 의료 등 새로운 지역수요 발생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 마련

인구위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 보장

-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합리적 대책의 자율적 수립 지원

25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비전 및 전략

비전

지역활력촉진 및 포용적 재생 실현

목표

인구활력 증대

산업활력 증진

지역활력 촉진

전략

인구유입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생활권 위계별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마케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공급

추진 기반

제도기반 구축

통합 추진체계

추진역량 강화

26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전략

인구유입 촉진

- ✓ 급격한 인구유출로 지역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 지역→인구유입 촉진전략 추진
 - 일반적 사례의 귀농귀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 타겟 은퇴자 유치 등
- ✓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취업준비생 레지던스 제공 등
- ✓ 5도(都)2촌(村) 등과 같이 도시생활을 유지하며 전원생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멀티해비테이션 (multi-habitation) 관련 시책 추진 등



<상주시 신태봉 전원마을>

27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전략

커뮤니티 활성화

- ✓ 위기지역 커뮤니티 스스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노인들이 함께 모여 소일거리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위한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육아·교육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등 학교와 함께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마련 등



<해남 땅끝마을의 남성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아빠캠프>

28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전략

지역특화산업 육성

- ✓ 지역경제기반 붕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양질이 일자리 부족이 고착화된 지역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로 생업이 가능한 지역맞춤형 특화산업 촉진 전략 필요
 - 기존 생업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 마련 등
-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되, 상품화·산업화하여 부가가치 창조
 - 지역 정체성, 전통성 보유 자원의 명품화 전략 등
 - 지역관광연계로 6차산업화 촉진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일본 가나자와 금박공예>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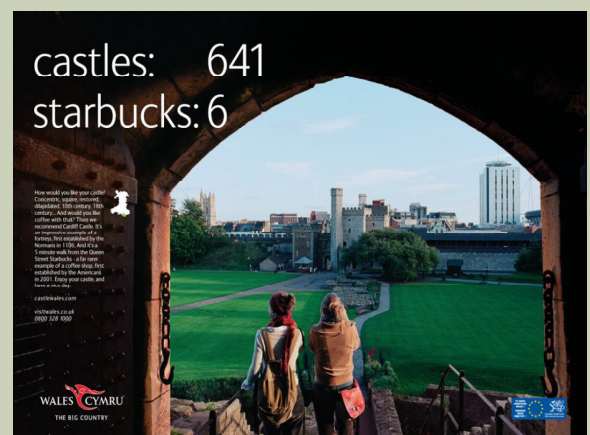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전략

지역마케팅 강화

- ✓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의 명품자산을 알려나가는 적극적인 지역홍보 전략 마련
 - 지역 고유의 특화 상품에 대한 유치목적 시장별 차별화된 지역 마케팅, 지역 브랜딩 전략 실시
- ✓ 지역 방문객 유치는 장기적으로 투자유치, 주민유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전략 연계 수립



<관광마케팅을 지역마케팅의 핵심으로 삼은 웨일즈의 Visit Wales 프로그램>

30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전략

생활권 위계별 서비스 제공

- ✓ 교육, 의료, 교통 등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생활사막(Life Deserts)의 불편을 겪는 생활취약주민들을 위한 기초서비스 제공
 - 전 지자체가 생활권 규모에 맞지 않는 컨벤션 센터, 대형 문화공간 건립을 지양하고, 고차서비스는 주변 중심도시와 연계활용 전략 마련
 - 효율적인 저차 생활서비스 공급 전략 다변화 노력
- ✓ 생활권 위계별 기초생활서비스 적정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 공급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서비스 거점(예: Life Oasis) 필요

31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 공급

- ✓ 지역주민의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 공급으로 낭비시설 최소화
- ✓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의 거주하더라도, 지역활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시설 공급
 - 저출산 문제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 지역은 육아친화마을 육성
 - 취학아동 가구세대 유입을 위한 아동친화마을 육성
 -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밀집해있는 지역은 다문화특화마을 조성
 - 은퇴자 등 유입전략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 고령화문제로 마을주민이 대부분 노인인 경우 노인장수마을 육성

32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기반 지원

제도기반 구축

인구 및 지역활력을 위한 제도 마련

-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군구 단위 제도 마련
- 인구위기지역을 선별하여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전략 마련

- 인구증가시대의 개발 관행을 타파하고 지역이 미래를 정확히 직면하도록 유도
- 지자체 자율의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전략 마련

인구위기지역 대상 특별지원 대책 마련

- 인구위기지역이 스스로 지역 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립기반 지원
- 우수계획 및 시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33

Ⅳ.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추진기반 지원

통합 추진체계 마련

생활서비스 적정공급을 위한 부처별 종합지원체계 확립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최소 서비스 기준 마련(국가최소기준 및 지역적정기준 통합)
- 부처별 서비스의 조정 기제 마련을 통한 컨트롤 타워 구축

사회·경제·공간정책의 통합적 추진

- 부처별·제도별 칸막이식 지원 및 하드웨어 위주의 지역개발사업 지양
- 사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전략 마련

인구위기지역 대상 범부처별 패키지 지원

- 사회적 활력/ 경제적 활력/ 공간적 활력 부문별 종합지원
- 범부처별로 인구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 노력

34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방향

- ✓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차원의 통합지원사업 마련 (2017.4)
- ✓ 통합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행안부 관련사업(마을기업, 공동체 정원 등) 우선지원 및 관련부처(농식품부, 국토부, 문체부 등)와 포괄적 협력 지원
- ✓ 민간기업(KT, 지역기업 등) 및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35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17.4~12
- ✓ 총 사업비: 147억원(특교세 88억, 지방비 59억, 매칭비율 60:40)
- ✓ 지원규모: 총 5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30억 이내)
-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시군구
 - : 2000~2015년 인구증감율이 -5% 이하인 지역
 - : 2013~2015년 평균 노령인구비율 20%이상인 지역
 - : 2013~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 2013~2015년 평균 20~39세 여성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 사업지역: 인구유출 방지가 가능한 읍면동(또는 다수마을) 생활중심지

36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유형

구분	상세내용
생활여건 개선	-특화마을 조성 및 거점마을 중심의 생활서비스 개선,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관련 사업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지자체간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활용, 읍면동 기능개선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및 개선
지역활력 제고	-지역의 자원·특산물·전통산업을 활용, 경제자립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민관 협업에 의한 지역활력 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역내 거주하는 청소년, 여성, 농어민, 노인 등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지원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및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	- ICT 기술을 활용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 스마트 타운 서비스 발굴·지원 -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을 통해 주민센터 행정의 스마트화, 읍면 협업 네트워크, 온라인 주민총회, 선순환 경제기반 등 조성

37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사업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강원도 평창군	지역활력 + ICT 기반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충청북도 음성군	공동체 활성화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체 활성화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전라북도 정읍시	지역활력 + 공동체 활성화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지 조성
전라북도 고창군	생활여건 개선 + 지역활력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체 활성화	농촌을 두드림! 아이의 울음! 희망이 열림!
경상북도 영양군	공동체 활성화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사업
경상남도 하동군	공동체 활성화 + ICT 기반	유엔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 조성
경상남도 합천군	생활여건개선 + 공동체 활성화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38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운영 및 관리

- ✓ 선정 지자체별 (가칭)지역활력 커뮤니티 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 전문가, 관련기관, 지역주민 조직
- ✓ 사업비 집행방법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 재원은 시군구 직접 집행(민간자본보조 집행 금지)
: 특별교부세는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 경비에 사용

39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17.9)



추진경위

- ✓ 지자체 저출산 적극 대응 위한 행안부 역할 강조(2016.7. 국회 저출산 대책 특위)
- ✓ 행안부 저출산 대책 TF 설치(2016.8),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
: 지자체 저출산 대책 전담부서 신설(17년 기준인건비 지자체 저출산 대책 전담인력 (242명) 반영)
- ✓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평가
: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특교세 21억), 선도지자체 공모사업 실시(특교세 29억)
: 지자체 합동평가 저출산 극복 분야 보강
- ✓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확대
: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합계출산율 반영(17년 14개 시도에 399억 지원)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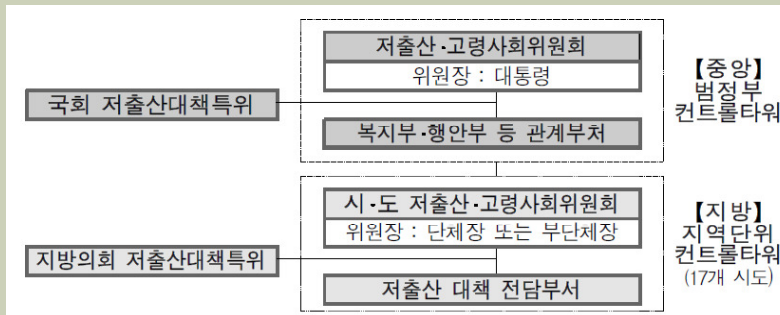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추진방향

✓ 지역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

- : 시도별 (가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확산 (ex.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
- : 시도별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ex. 인천시 중장기 기본계획)
- : 지방의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확산 (ex.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 : 저출산 대책 종괄 표준 조례안 마련



41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추진방향

✓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구축 및 운영 내실화 지원

- :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정원 반영

✓ (가칭)지역인구정책팀(단) 설치모델

현행	정책기획(종괄) *지역인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 통계팀> • (기획) 지역인구통계 주계 및 분석 • <복지부서 사업팀> • (기획)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교육 및 홍보/ 저출산 시책발굴 및 추진 •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급/ 임신부 등 의료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 기초연금 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광역></th><th>• <기초></th></tr> </thead> <tbody> <tr> <td>(이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교육 및 홍보/ 대응시책 발굴</td><td></td></tr> <tr> <td>(신규) 지자체내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td><td></td></tr> <tr> <td>(이관) 지역인구통계 진단</td><td>(신규) 지역맞춤형 시책발굴</td></tr> <tr> <td>(신규) 시군구 인구통계 표준화 및 지원/ 시군구 시책개발 권선텐/ 지자체 평가 대응/ 시군구 인센티브</td><td>(신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td></tr> <tr> <td></td><td>(신규) 시군구간, 시군구-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td></tr> <tr> <td></td><td>(신규) 조례 등 제도적 기반 운영</td></tr> </tbody> </table>	• <광역>	• <기초>	(이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교육 및 홍보/ 대응시책 발굴		(신규) 지자체내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이관) 지역인구통계 진단	(신규) 지역맞춤형 시책발굴	(신규) 시군구 인구통계 표준화 및 지원/ 시군구 시책개발 권선텐/ 지자체 평가 대응/ 시군구 인센티브	(신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신규) 시군구간, 시군구-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신규) 조례 등 제도적 기반 운영
• <광역>	• <기초>														
(이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교육 및 홍보/ 대응시책 발굴															
(신규) 지자체내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이관) 지역인구통계 진단	(신규) 지역맞춤형 시책발굴														
(신규) 시군구 인구통계 표준화 및 지원/ 시군구 시책개발 권선텐/ 지자체 평가 대응/ 시군구 인센티브	(신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신규) 시군구간, 시군구-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신규) 조례 등 제도적 기반 운영														

42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추진방향

✓ 선도모델 및 우수시책 발굴

: 선도모델 발굴을 위한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추진

: (16년)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공모사업 특교세 29억 지원 (성북구, 부여군, 완주군, 익성군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밀양시 가족친화마을)

: (17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복지부 공동) 특교세 40억 지원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으로 사상구 등 9개소,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으로 과천시 등 10개소)

✓ 우수사례 확산

: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우수 지자체 포상(특교세 10억이내) 지급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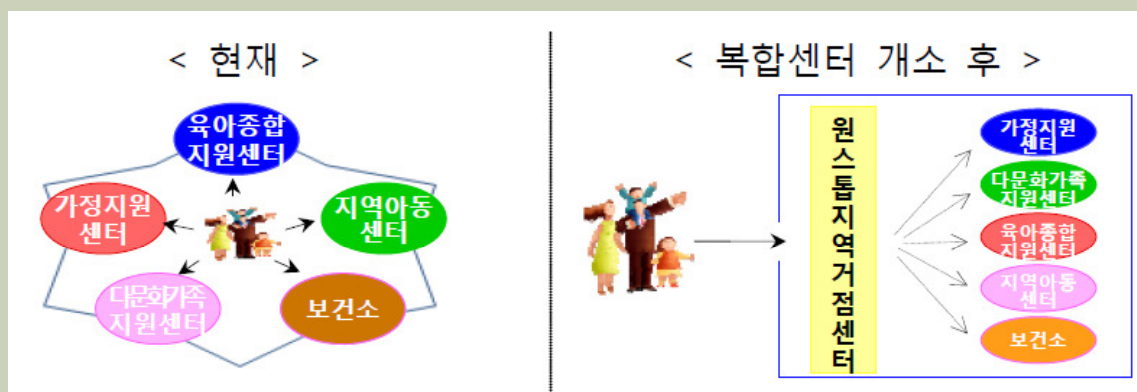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공모사업 유형

①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구축

: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 추진



44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선정사업(2017)

구분	주요내용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4억) : 구 주민센터 리모델링
대구 남구	온 마을 아이맘센터 조성(4억) : 구 경북개발공사 부지에 육아북카페 확충
광주 광산구	맘쓰리 센터 설치운영(4.5억) : 주민센터 활용 공동육아방 조성
세종시	행복맘~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4억): 시 종합복지센터 3층에 보건지소 연계 구축
경기 오산시	시정사를 활용한 행복 육아 놀이터 조성(4억): 시청 광장에 놀이터 조성
강원 삼척시	삼척 SOS 통통센터 조성(4.5억) : 재래시장내 상가건물 리모델링
충남 서천군	다함께 누리는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조성(4.5억) : 지역순환경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공간 통합
전북 순창군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4.5억) : 구 보건의료원 3층 리모델링
경북 상주시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 구축(4.5억) :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치

45

[별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공모사업 유형

②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공동)

- :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돌봄 안전망 구축
- : 만 0~12세 모든 아동대상, 취약시간(6~8시, 17~24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행안부는 시설 리모델링비(특교세), 복지부는 운영비(국비) 등 상호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 협력모델 운영

46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17.4~12
- ✓ 총 사업비: 147억원(특교세 88억, 지방비 59억, 매칭비율 60:40)
- ✓ 지원규모: 총 5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30억 이내)
-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시군구
 - : 2000~2015년 인구증감율이 -5% 이하인 지역
 - : 2013~2015년 평균 노령인구비율 20%이상인 지역
 - : 2013~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 2013~2015년 평균 20~39세 여성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 사업지역: 인구유출 방지가 가능한 읍면동(또는 다수마을) 생활중심지

47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유형

구분	상세내용
생활여건 개선	-특화마을 조성 및 거점마을 중심의 생활서비스 개선,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관련 사업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지자체간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활용, 읍면동 기능개선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및 개선
지역활력 제고	-지역의 자원·특산물·전통산업을 활용, 경제자립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민관 협업에 의한 지역활력 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역내 거주하는 청소년, 여성, 농어민, 노인 등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지원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및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	- ICT 기술을 활용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 스마트 타운 서비스 발굴·지원 -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을 통해 주민센터 행정의 스마트화, 읍면 협업 네트워크, 온라인 주민총회, 선순환 경제기반 등 조성

48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사업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강원도 평창군	지역활력 + ICT 기반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충청북도 음성군	공동체 활성화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체 활성화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전라북도 정읍시	지역활력 + 공동체 활성화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지 조성
전라북도 고창군	생활여건 개선 + 지역활력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체 활성화	농존을 두드림! 아이의 울음! 희망이 열림!
경상북도 영양군	공동체 활성화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 구축사업
경상남도 하동군	공동체 활성화 + ICT 기반	유엔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 조성
경상남도 합천군	생활여건개선 + 공동체 활성화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49

[별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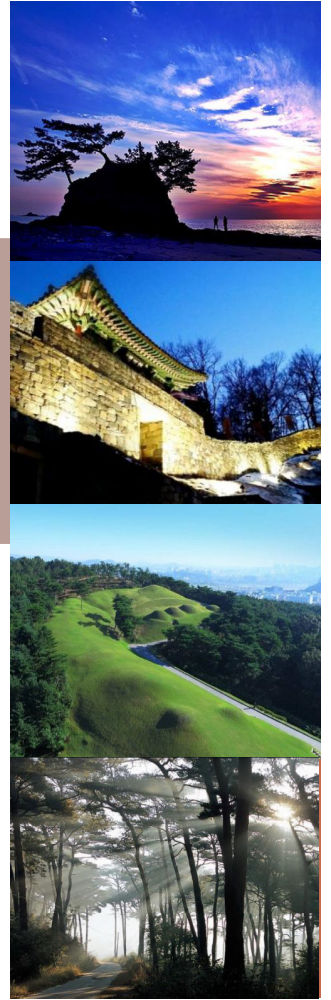


사업운영 및 관리

- ✓ 선정 지자체별 (가칭)지역활력 커뮤니티 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 전문가, 관련기관, 지역주민 조직
- ✓ 사업비 집행방법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 재원은 시군구 직접 집행(민간자본보조 집행 금지)
: 특별교부세는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 경비에 사용

50

감사합니다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모색

메모

M E M O

M E M O

M E M O